

<2022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01. 지방재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난다.
- ②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자주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 ③ 수입과 지출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어서 탄력적이다.
- ④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규모 면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단체는 면적, 인구, 산업구조 등 처한 환경이 모두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재정주체로서 지방재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② (O)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현되는 의존재원입니다.
- ③ (X) 지방재정의 수입구조는 지방정부의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수입과 지출이 대부분 고정 X).
- ④ (O)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자원배분과 도와 시·군 간의 자원배분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 ③

0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 ② 1992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광역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다.
- ③ 김영삼 정부 시절,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
- ④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해설>

- ② (X) 기초의원 선거는 1991년 3월, 광역의원 선거는 1991년 6월에 실시되었으나, 지자체장 선거는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답: ②

03.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인구 3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② 인구 1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4만 이상인 군
- ③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2만 이상인 지역
- ④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으로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해설>

- ① (X) 인구 3만이 아닌 5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② (X) 인구 2만(1만 X)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4만 X) 이상인 군입니다.
- ③ (X)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습니다.
- ④ (O)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
|---|
| <p>「지방자치법」 제10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u>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u>.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
|---|

답: ④

04. 「지방자치법」상 <보기>의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보기>

- 지방의회는 매년 ㉠ 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관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 일 이내에 소집한다.
- 긴급할 때를 제외하고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 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① 26
- ② 28
- ③ 30
- ④ 32

<해설>

- ㉠: 2(「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 ㉡: 25(「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
- ㉢: 3(「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③

0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안건을 의결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속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 ① (X)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결한 후에 X).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O) 「지방자치법」 제145조
- ③ (O) 「지방자치법」 제143조
- ④ (O)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자치법」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답: ①

06.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 ④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권리뿐 아니라 주민의 의무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해설>

- ② (X)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④ (O) 「지방자치법」 제27조
- ③ (O) 「지방자치법」 제25조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답: ②

07.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와 그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통제 수단을 가진다.
 - ② 중앙정부는 사법통제의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 ③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회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강제력이 있다.
 - ④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법한 통제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해설>

- ① (O) 중앙통제의 방식에는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가 있습니다.
- ② (O) 헌법 제107조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③ (X) 행정협의회조정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나, 협의·조정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상 이행명령권이나 대집행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구속력이 약하고, 강제력이 없습니다.
- ④ (O)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등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법한 통제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답: ③

08. <보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이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궐위된 경우
- 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 ㄷ.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해설>

ㄱ. 궐위된 경우, 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권한대행을 하며, ㄷ.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1. 궐위된 경우
-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답: ①

09. 특별지방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지방정부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정부를 말하며, 지방정부만 설립이 가능하여 통치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 ②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 ③ 주로 상·하수도, 하천관리, 공원, 주택 등의 분야에서 설치된다.
- ④ 법인격을 갖고 있고, 기업과 달리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의 자치권을 지니고 있다.

<해설>

- ① (X) 기능적 성격의 관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제기능보다는 상대적으로 서비스기능 즉, 급부행정기능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지역차원의 통치기능이 강조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 ② (O)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이론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법인격을 가진 지방기구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재현 저 ‘지방행정론’).
- ③ (O)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설립목적에 따라 사무종류가 다소 상이하나, 광역사무가 주요 대상입니다(지역계획, 교통, 소방, 쓰레기, 전기, 상·하수도).
- ④ (O)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에서 공법인으로 설치됩니다.

답: ①

10. <보기>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보조기관
 ㄴ. 하부행정기관
 ㄷ. 사업소
 ㄹ. 출장소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ㄷ. 사업소, ㄹ. 출장소는 소속 행정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답: ④

11. 아른스타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에서 형식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상담(consultation)
- ② 정보제공(informing)
- ③ 회유(placation)
- ④ 권한위임(delegated power)

<해설>

형식적 참여에 해당하는 것은 보상회(정보제공, 상담, 회유)입니다. 권한위임은 주민권력 단계에 해당합니다.

답: ④

1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① (X)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입니다(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X).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② (O)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4항
- ③ (O)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6항
- ④ (O)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답: ①

1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치산선고를 받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이 주민 감사 청구를 각하할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해설>

- ① (O)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 ② (O) 「지방자치법」 제21조 제2항
- ③ (O) 「지방자치법」 제21조 제5항
- ④ (X) 각하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답: ④

1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권한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결처분권
- ②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 ③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
- ④ 행정사무 조사권

<해설>

④ (X) 행정사무 조사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답: ④

15.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② 인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자치구의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인수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3항
- ② (O)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4항
- ③ (X) 20명이 아닌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지방자치법」 제105조 제5항).
- ④ (O)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6항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답: ③

16. 지방자치의 의의와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개성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자치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자체 간 경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 ③ 주민의 정책참여가 용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로 인해 국가 전체적 통합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해설>

- ② (X) 지방자치는 각 부분 주체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답: ②

17.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결정족수와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징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제명 의결
- ②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조례
- ③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동의
- ④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

<해설>

- ① (X)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O)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X)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X)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 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답: ②

18. 지방교부세법령상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측정할 때 사용되지 않는 측정단위는?

- ① 공무원 수
- ② 취업인구수
- ③ 자동차대수
- ④ 사업체종사자수

<해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공무원수, 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노령인구수, 아동수, 등록장애인수, 산림면적, 어장면적, 갯벌면적, 사업체종사자수, 도로면적, 자동차대수, 행정구역면적으로 합니다(취업인구수 X).

답: ②

1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지출 지출할 수 없다.
- ②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③ 법률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지방채발행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 ① (O)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 ② (O) 「지방재정법」 제18조
- ③ (O)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 ④ (X)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답: ④

20.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 ②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의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가 아니다.
- ③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
- ④ 1개 시·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 ① (O) 자치경찰제를 통해 분권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② (X)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입니다.
- ③, ④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답: ②